

[주간동향] 2006. 7. 13~7. 19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 확정
- ❖ 여성 취업자 수 사상 최대 기록, 안정성은 열악
- ❖ 보건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
- ❖ 여성가족부, 성매매 시민감시단 운영
-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정책 성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 14일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구조에 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각종 정책을 총동원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각 부처가 그간 발표해온 정책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경제 구조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제, 보육비 지원 확대, 주택분양 인센티브 제공, 입양수당 지원 등의 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육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하고,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시 급여지원 및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 근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등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 여성 취업자 수 사상 최대 기록, 고용안정성은 열악

통계청이 7월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여성 취업자는 991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해 머지않아 1천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어 여성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전체 취업자는 2천350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5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성 취업자는 991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20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2.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여성 인구의 증가와 활발한 사회 진출로 여성 취업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2.1%)은 남성 취업자 0.4%(5만명)의 5배를 넘었다. 여성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63만4천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30만명, 20대 212만2천명, 50대 156만7천명, 60세 이상 117만6천명, 15~19세 11만9천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대 여성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20대 남성(8.2%)과 50대 남성(10.1%)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성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12개 계층에서 30대 남성(16.5%)과 40대 남성(16.3%)에 이어 세 번째로 취업자 비중이 높아 취업시장의 주력군으로 자리 잡았다. 또 국회의원, 고위직 임원, 관리자,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지난달 현재 183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7천명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증가 규모 6만7천명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급여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계약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 295만1천명, 근로계약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113만3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38만3천명 등, 여성 취업자의 55.1%에 해당하는 546만7천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입양 휴가제와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 등을 포함한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입양 휴가제는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전후한 2주간을 기한으로 우선 시행되며,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외 입양을 대체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양아에 대해 5개월간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외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입양부모의 자격조건 중 자녀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여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글교육 확대 운영 및 한국 문화 체험, 쉼터 운영 등을 진행하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홍보 활동과 입양 민간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과 가정 위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성매매 시민감시단 운영

여성가족부가 신·변종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속히 늘고 있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신·변종업소의 음성적 성매매 및 알선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시민감시단은 8월부터 연말까지 특별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광역지역에서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경찰청 내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에 신고하는 성매매방지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요령 및 활동지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에는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활동에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며, 8월부터 연말까지 시민감시단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7월 18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성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처벌에 대한 수위를 현재보다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신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설문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96.9%)과 ‘성범죄에 대한 신고죄 규정’(96.6%)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95.5%, ‘신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1.3%에 달한 반면, ‘신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신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모든 성범죄자는 처벌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신고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35.4%), ‘살인·폭행·강도 등 다른 범죄의 처벌과 형평성이 없기 때문’(7.7%) 등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고, 공소시효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성명, 번지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는 물론 사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처럼 성범죄자의 성명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만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17.9%를 차지했다.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지한다’는 응답이 29.3%,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직접방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13.2%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정책 성과 발표

상당수 부처의 균형인사정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균형인사란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취급받아온 계층의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뜻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균형인사정책 성과를 지수화한 결과, 기관 간 편차가 심하고 미흡한 기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업무가 여성·장애인·이공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 균형인사정책 성과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수는 여성·장애인·과학기술(이공계)분야 등 3개 부문으로 측정되었으며, 0.85점 이상은 ‘우수’, 0.7~0.84점은 ‘보통’, 0.7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여성의 채용, 관리자 임용비율, 승진, 보직, 교육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52개 부처의 평균 지수는 0.75점으로 ‘보통’이었다. 여성가족부가 0.99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이어 청소년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각각 0.91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0.90점, 외교통상부 0.87점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0.32점, 금융감독위원회가 0.46점, 공정거래위원회가 0.69점 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18개 기관은 0.7점 이하로 ‘미흡’에 해당했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승진·장애정도·계급·보직 등 5가지 항목에서 평가한 지수는 평균 0.68점으로, 52개 행정기관 전체 평균이 ‘미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0점을 기록했으며, 대검찰청이 0.22점, 소방방재청이 0.23점, 국무총리 비서실이 0.28점 등 절반이 넘는 29개 기관이 ‘미흡’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0.87점의 관세청, 0.86점의 건설교통부, 0.85점의 환경부 등 세 곳밖에 없었다. 이공계 균형인사 지수는 더욱 낮아 평균 0.65점에 불과했다. 건설교통부가 0.97점, 과학기술부가 0.88점, 환경부가 0.87점으로 세 부처만 ‘우수’로 분류된 반면 비상기획위원회 0.36점, 국정홍보처 0.40점, 통일부 0.48점 등 35개 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평가는 지난해 말 실시했지만 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그동안 다소 개선된 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